

2020년 국가직 9급 (2020.7.11.)

해설 : 이승철

01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하였다.
- ② 1930년대 뉴딜정책은 정치·행정 이론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 배경이다.
- ③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은 정치·행정 이론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 ④ 정치·행정 이론론을 대표하는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이 단절적이라고 보았다.

해설

- ① (○) 정치·행정 이론론(행정관리론)은 업관주의가 부정부패와 행정의 비전문성·비능률성을 초래함에 따라 행정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간섭의 배제(정치와 행정의 분리)와 행정의 독자성·전문성·능률성·기술성 확보를 주장하였다.
- ② (×) 1930년대 뉴딜정책은 정치·행정 이론론(통치기능설)이 등장하게 된 중요 배경이다.
- ③ (×)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공직개혁으로서 진보주의 운동)은 정치행정이론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 ④ (×) 정치·행정 이론론(통치기능설)을 대표하는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은 단절적·배타적이기보다는 **협조적이며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았다.

답 ①

02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가 강조되어 변화를 위한 주장은 통제된다고 본다.
- ②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이 논의되고 불리한 이슈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된다고 한다.
- ③ 위험과 같은 폭력적 방법을 통해 특정한 이슈의 등장이 방해받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 ④ 조직의 주의집중력과 가용자원은 한계가 있어 일부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고 주장한다.

해설

- ④ (×) 무의사결정론은 특정사회에서 지배엘리트는 그들의 이해관계와 일치되는 문제만 정책화하고(밝은 얼굴), 지배엘리트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은 정책의제화 되지 못하게 방해·억압(어두운 얼굴, 무의사결정)하므로 일부 사회문제만 정책의제로 선택된다고 본다. 일부 사회문제만 정책의제로 선택되는 이유로 주의집중력의 한계를 드는 것은 H. Simon의 견해이며, 체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환경에서의 투입요소를 체제의 능력범위 내로 선별 수용하면서 체제의 문지기(행정부 首班)가 선호하는 문제가 의제화된다는 것은 체제이론의 시각이다.

답 ④

03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치사법권은 인정되고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속한다.
- ③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이다.
- ④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기초자치 단체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해설

- ① (×)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사법권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사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제정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장(자치단체장, 교육감)의 규칙제정권이 있다.
- ④ (×)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제로 운영되는 광역자치단체이며 자치권을 갖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이며 자치권이 없다.

답 ②

04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고객의 요구를 존중한다.
- ㉡ 무결점을 향한 지속적 개선을 중시한다.
- ㉢ 집권화된 기획과 사후적 통제를 강조한다.
- ㉣ 문제해결의 주된 방법은 집단적 노력에서 개인적 노력으로 옮겨간다.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 (○) 고객의 참여, 고객 만족, 고객의 선택, 고객에의 책임 등을 중시.

- ㉔ (○) 서비스의 질은 고객만족에 초점을 두므로, 정태적이 아니라 계속 변동되는 목표이며, 산출이 아니라 투입과 과정의 지속적인 환류와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므로 결정이 없어질 때까지 개선활동을 반복한다.
- ㉕ (×) 수평적 분권적 구조 중시, 사전적 품질관리 중시
- ㉖ (×) 개인적 노력보다는 집단적 노력·팀워크·협력 중시

TQM의 특징	사전적 품질 관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수평적 분권적 구조	협력	집단적 노력·팀워크·협력 중시	통계적 자료와 과학적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	고객위주의 행정 (Post-Fordism, 소비자 중심)	고객에 의한 서비스 품질 평가	장기적 거시적 안목	투입과 과정의 지속적 개선·환류 (무결점주의)	무가치한 업무나 과오·낭비의 불허
TQM의 특징이 아닌 것	사후적 품질 관리	서비스의 양적 수준 증대	수직적 집권적 구조	분업	개인적 개별적 노력 중시, 개인 별 성과 측정	통계적 자료와 과학적 절차의 경시	관심 행정 (Fordism, 공급자 중심)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품질 평가	단기적 미시적 안목	결과나 산출에 초점, 일시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낭비의 허용

답 ①

05 프렌치와 레이븐(French & Raven)이 주장하는 권력의 원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법적 권력은 권한과 유사하며 상사가 보유한 직위에 기반한다.
- ② 강압적 권력은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하며 인간의 공포에 기반한다.
- ③ 전문적 권력은 조직 내 공식적 직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준거적 권력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고자할 때 발생한다.

해설

- ② (×) 강압적 권력은 불복종시 발생할 부정적 결과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공포)에 근거를 두지만,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한 것은 준거적 권력이다.

☞ 프렌치와 레이븐(J. French & B. Raven)의 권력 유형

보상적[보수적](reward) 권력	타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보상을 줄 수 있는 능력에 근거를 둬(공리적 권위와 유사)	직위 권력
강요적[강압적](coercive) 권력	불복종시 발생할 부정적 결과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근거를 둬(강제적 권위와 유사)	
합법적[정통적](legitimate) 권력	법·제도에 근거한 권력. 권력행사자가 정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며 '권한'이라고도 함(M. Weber의 합법적 권위와 유사). 상관이 보유한 직위에 기반을 두므로 지위가 높아질수록 커지며 조직에 의해 부여되고 보장됨. 기계적 조직에서는 엄격하며 유기적 조직일수록 불분명함.	
준거적(referent) 권력	복종자가 지배자와 일체감을 가지고, 자기의 행동모형을 권력행사자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역할모형화에 의한 권력으로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월등하다고 느끼는 무언가의 매력이나 카리스마에 의한 권력. 일체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Simon의 신뢰의 권위와 일체화의 권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며, M. Weber의 카리스마적 권위와 유사).	개인 권력
전문가적(expert) 권력	전문적 지식·기술을 지닐 때 발생하는 권력. 직위나 직무를 초월해 누구나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식적 직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전문적 권위와 유사).	

답 ②

06 직위분류제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기준으로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등을 활용한다.
- 개인에게 공정한 보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 ① 직무조사 ② 직무분석 ③ 직무평가 ④ 정급

해설

직무평가의 내용이다. 직무의 책임도·곤란도에 따라 직급·등급을 결정하며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등이 활용된다. 등급은 직무급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직무평가는 직무의 책임도·곤란도에 비례한 공정한 보수 제공에 필요한 작업이다.

답 ③

☞ 직위분류제 수립절차

사전준비	계획수립 및 분류담당자·분류대상직위의 선정
↓	
직무조사 (직무기술서 작성)	질문지법, 면접법, 관찰법 등에 의하여 분류될 직위의 직무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수집·기록(실제공무원의 직무내용 조사·기술).
↓	
직무분석	직무기술서를 토대로 직무의 종류·성질에 따라 직류·직렬·직군별로 수직적·종적 분류구조 형성
↓	

직무평가

- 직무의 책임도·곤란도에 따라 직급·등급별로 수평적·횡적 분류구조를 형성하는 것.
- 직무수행의 곤란성, 책임성, 복잡성, 자격요건 등의 차이를 기초로 하여 각 직위가 내포하고 있는 상대적 수준 또는 가치·비중에 따라 분류되며, 등급의 설정은 직무급 보수체계 확립의 중요한 기반이 됨.
- 직무평가 방법

특징		직무와 기준표 비교(절대평가)	직무와 직무 비교(상대평가)
비계량적(주관적) 방법	직무전체 파악	분류법(정부에서 주로 사용)	서열법
계량적(객관적) 방법	직무구성요소별 파악	점수법(사기업에서 주로 사용)	요소비교법

↓

구분	기준	결정내용	분류구조	기초자료	목적
직무분석	직무의 종류와 성질	직군·직렬·직류별	수직적·종적 분류	직무기술서에 기초	직무중심의 객관화·과학화·합리화
직무평가	직무의 책임도·곤란도	등급·직급별	수평적·횡적 분류	직무분석 자료에 기초	보수의 공정성·합리화

직급명세서 작성

직급명세서란 ㉠ 직급명, ㉡ 직무내용(직무의 개요)과 직무수행의 예시, ㉢ 자격요건, ㉣ 보수액, ㉤ 채용방법 등 각 직급의 직급별 특징에 관하여 정의·설명한 것.

↓

정급

분류대상 직원들을 해당 직군·직렬·직류와 직급·등급에 배정.

↓

사후관리·수정

직원분류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하여 수정·보완.

0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지난 30년간 자료를 중심으로 전국의 자연재난 발생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한 다음, 홍수와 지진 등 두 가지 이상의 재난이 한 해에 동시에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면밀하게 관찰하며 정책을 결정한다.

- ① 만족모형 ② 점증모형 ③ 최적모형 ④ 혼합탐사모형

해설

전국 - 개략적 / 일부 지역 - 면밀 관찰

위 단어로 추정하면 혼합탐사모형의 기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을 연관지을 수 있다. 혼합탐사모형은 의사결정의 계층성을 전제로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을 나누는 의사결정모형으로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한편(근본적 결정: 모든 대안을 탐색하되 개략적 예측) 그 방향성 안에서 심층적이고 대안적인 변화를 시도(세부적 결정: 소수 대안만을 대상으로 세밀한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혼합탐사모형의 기본적(근본적) 결정과 세부적(부분적) 결정의 지속적 교호작용

구 분	기본적·근본적 결정(Fundamental Decision)	세부적·부분적 결정(Bit Decision)
	세부결정을 위한 테두리나 맥락을 결정하는 행위. 환경의 급변, 전체적 문제상황의 변화시 행함.	기본적 결정의 구체화·집행. 안정된 상황에서 단기적 변화에 대처.
대안탐색 (고려할 대안의 수)	중요한 대안을 포괄적으로 모두 고려 (포괄적 합리모형)	기본적 결정의 범위 내에서 소수의 대안만 고려 (점증주의)
대안분석 (각 대안의 결과 예측)	대안들의 중요한 결과만을 개략적으로 예측 (합리모형의 엄밀성을 극복)	대안의 결과는 세밀하게 분석 (포괄적 합리모형)

구 분	합리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기본적 결정)	혼합모형(세부적 결정)
고려할 대안의 수(대안탐색)	포괄적	한정적	포괄적(전체)	한정적(부분)
각 대안의 결과예측(대안분석)	포괄적	한정적	한정적(개괄적 예측)	포괄적(세밀한 예측)

답 ④

08 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반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은 뒤에 예산을 배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산 재배정이라고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집행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예산정책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 ① (○), ② (×) 반기별 ⇨ 분기별 / 국회의 심의를 받은 뒤에 ⇨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얻어

•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재배정이 아니라 배정이다.



예산 배정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 후 대통령 승인을 얻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 배정.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적 절차.
예산 재배정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다시 산하 재무관(부속기관·하급기관)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을 배정해 주는 것.

④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예산집행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국회에는 통보 안 함.

-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산편성지침	기재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기재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
예산집행지침	기재부장관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성해 매년 1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

답 ①

09 정책평가를 위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당성은 없지만 신뢰성이 높은 측정도구가 있을 수 있다.
- ② 신뢰성이 없지만 타당성이 높은 측정도구는 있을 수 없다.
- ③ 신뢰성은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다.
- ④ 타당성이 없는 측정도구는 제1종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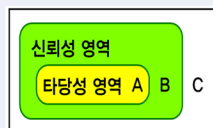
해설

타당성 : 측정의 정확성 / 신뢰성 : 측정의 일관성

- ① (○) 측정의 정확성은 없지만 일관성은 있을 수 있음 (예 체중 90kg인 사람이 체중계 측정시마다 60kg으로 나옴)
- ② (○) 측정의 일관성이 없으면 정확성 확보가 안 됨 → 신뢰성이 낮으면 타당성도 낮음(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조건 - 타당성이 확보되려면 최소한 신뢰성은 전제되어야 함).
- ③ (×) 측정의 일관성이 있어도 정확성까지 보장할 수는 없음. 타당성이 확보되려면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님. 신뢰성이 타당성의 충분조건은 아님.
- ④ (○) 정책평가의 타당성은 정책수단과 정책목표간 인과관계와 관련되며 타당성이 없는 측정도구는 인과관계 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해 1종오류(실제 효과가 없는 대안을 효과가 있다고 판단)나 2종 오류(실제 효과가 있는 대안을 효과가 없다고 판단)를 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신뢰도와 타당도

- ① 신뢰성이 낮으면 타당성도 낮다. - C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조건 - 타당성이 확보되려면 최소한 신뢰성은 전제되어야 함).
- ② 신뢰성이 높다고 항상 타당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 A, B (신뢰성은 타당성의 충분조건은 아님).
- ③ 타당성이 높으면 신뢰성도 높다. - A
- ④ 타당성이 낮다고 항상 신뢰성이 낮은 것은 아니다. - B, C



구분	A 영역	B 영역	C 영역
타당성	높음	낮음	낮음
신뢰성	높음	높음	낮음

답 ③

10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겸임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특정직 공무원이며, 겸임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② 전직은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 사이의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직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 ③ 같은 직급 내에서 직위 등을 변경하는 전보는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전보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이나 범위를 두고 있다.
- ④ 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어 하위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려면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지급된다.

해설

- ① (×) 겸임은 주로 일반직 공무원에 인정되나, 교육공무원법 상 특직직인 교육공무원에게도 인정되며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을 대하 교수 등 특직직공무원이나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공무원임용령 제40조(겸임) ③ 제2항에 따른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 인사관할을 달리하는 기관 사이의 수평적 인사이동은 전임이며 원칙적으로 시험을 거쳐 임용한다.
-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이며, 원칙적으로 전직시험을 거쳐야 하며, 예외적으로 시험의 일부나 전부의 면제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전직)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2(전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임하려는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 자격 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시험과목이 같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배치전환(配置轉換) 제도

전직(轉職)	동일한 등급·계급 내에서 상이한 직렬로 수평 이동 - 원칙적으로 전직시험 필요(직위분류제적 요소).
전보(轉補)	① 동일 직급, 동일 직렬 내에서의 직위(보직)의 변경,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 보직변경 - 시험 필요 없음. ② 필수보직기간(전보 제한 기간) : 3년으로 하되,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2년으로 함.
전임·전출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간 이동 - 전입시험 필요
파견근무	공무원의 소속을 바꾸지 않고, 일시적으로 타 기관이나 국가기관 이외의 기관, 단체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
겸임(兼任)	①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한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 ② 겸임기간은 2년 이내, 필요시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④ (×) 강임은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①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답 ③

11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업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경우 잠재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 ② 고전적 관점에서 갈등은 조직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한다.
- ③ 의사소통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정보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 ④ 진행단계별로 분류할 때 지각된 갈등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을 의미한다.

해설

- ① (○) 과업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은 둘 이상의 집단이 목표달성 행동에 있어서 상호간에 협조·정보제공·동조 또는 협력행동을 필요로 하는 정도이며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잠재적 갈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② (○) 갈등 유발(조장)전략의 하나로 의사전달과정에서 정보전달의 통제(정보량 조절; 정보전달 억제나 과잉노출)를 들 수 있다. 이는 모든 의사전달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무관심 상태를 타파하고, 조직구성원의 정체된 행태를 활성화하며 창의성·자율성을 일깨울 수 있다.
- ② (○) 갈등에 대한 고전적 관점, 전통적(traditional) 견해는 갈등 유해론적 시각에서 모든 갈등은 제거대상이며 직무의 명확한 규정 등을 통해 갈등을 제거할 수 있다고 봄.
- ④ (×) 폰디(L. R. Pondy)의 5단계 갈등모형에 따르면 잠재적 갈등이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이며 지각된 갈등은 당사자들이 갈등의 잠재성을 알게 된 상태이다.

잠재 단계(latent stage)	갈등의 선행조건(갈등을 내재한 여러 조건).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	개 2마리, 개껌은 1개만 제공
지각된[인지된] 단계(perceived stage)	갈등을 인식(당사자가 갈등의 잠재성을 알게 됨)	개 2마리가 개껌 때문에 문제 생길 것을 인식
감정적[느낀] 단계(felt stage)	적의(敵意)·적대감정 형성	상대 개를 제압해야한다는 생각을 함
명백한[표면화·顯在化] 단계(manifest conflict)	적대적인 행동, 실제로 갈등행동 발생	개싸움, 개껌 쟁탈전
갈등의 여파(conflict aftermath)	조직이 갈등에 대응한 후 남는 조건 또는 상황. 그 이후의 갈등에 영향을 줌	견주가 1개 더 가져와 1개씩 분배

답 ④

12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량과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예산액을 산정한다.
- ③ 계획예산제도는 비용편익분석 등을 활용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 ④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에서 의사결정단위(decision unit) 설정,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 등이 필요하다.

해설

- ① (×)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투입요소인 지출대상(품목)별(인건비, 소모품비, 출장비 등)로 분류하여, 지출대상과 그 비용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통제지향적·투입지향적 예산제도이다. 무엇(what?)을 구매하는지 알 수 있지만, 왜(why?) 구매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투입과 산출의 연계 부족),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하지 못한다.

답 ①

13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보건소의 운영업무와 병역자원의 관리업무는 대표적인 기관위임 사무이다.
- ③ 중앙정부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사전적 통제보다 사후적 통제를 주로 한다.
- ④ 기관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해설

- ② (×) 보건소의 운영업무는 단체위임사무이지만 병역자원의 관리업무는 기관위임사무이다.

구 분	자치사무(교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의의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단체 존립과 관련된 본래적 사무	국가나 상급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개별 법령에 의해 위임한 사무	국가나 상급자치단체가 포괄적 법령 근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게 위임한 사무
사무성질	지방적 이해를 갖는 사무	지방적 + 전국적 이해관계	전국적 이해관계
사무처리주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일선기관의 지위)
결정주체	지방의회	지방의회	국가(집행기관에 위임)
지방의회의 관여	가능	가능	불가능(단, 경비 부담시 관여 가능)
자치입법	조례, 규칙	조례, 규칙	규칙(조례 불가)
경비부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국가보조금은 장려적 보조금	위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동부담 국고보조금은 부담금(일정 비율 분담)	전액 위임기관이 부담 국고보조금은 교부금(전액 부담)
배상책임	지방 책임	국가·지방 공동책임	국가 책임
국가의 감독	합법성 통제 사후·교정적 감독	합법성 + 합목적성 통제 사후·교정적 감독	합법성 + 합목적성 통제 사후·교정적 + 사전·예방적 감독
예	지역소방, 상하수도, 오물처리 및 청소, 시장·병원·공원·도서관·운동장 설치, 초등학교 교육, 학교급식, 도시계획, 도서관, 지방세 부과·징수 등	보건소 운영, 시·군의 도세 징수, 시·도의 국세 징수, 도의 국도 유지·수선, 광역자치단체의 하천 보수·유지, 국유하천 점유료 및 사용료 징수, 국민기초생활보장사무, 전염병예방접종, 재해구호 등	경찰, 징병, 민방위, 선거, 인구조사, 경제통계, 농업개발, 상공업 및 수산업 진흥업무, 공유수면 매립면허, 지적, 국세조사, 병역자원관리 등

답 ②

14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적·제도적 접근 방법은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과 행태를 행정 현상의 설명변수로 규정한다.
- ② 신제도주의 접근 방법에서는 제도를 공식적인 구조나 조직 등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규범 등도 포함한다.
- ③ 후기 행태주의 접근 방법은 행정을 자연·문화적 환경과 관련하여 이해하면서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한다.
- ④ 툴민(Toulmin)의 논변적 접근 방법은 환경을 포함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 현상을 분석하고, 확실성을 지닌 법칙발견을 강조한다.

해설

- ① (×) 법적·제도적 접근 방법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한 각종 제도·기관·직제 등을 연구하는 이론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과 행태를 고려하지 못한다.
 ③ (×) 생태론에 대한 설명이다.
 ④ (×) 논변적 접근방법은 자연현상의 법칙성을 연구하는 과학과는 달리 행정현상과 같은 가치측면의 규범성을 연구할 때는 결정에 대한 주장의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행정에서 진정한 가치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논리성을 점검하고 상호 타협과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 절차에 있다고 본다.

답 ②

15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공익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
 ㉡ 목적론적 윤리론을 따르고 있다.
 ㉢ 효율성(efficiency)보다는 합법성(legitimacy)이 윤리적 행정의 판단기준이다.

① ㉠

② ㉡

③ ㉠, ㉡

④ ㉡, ㉢

해설

- ㉠ (○) 공리주의는 공익에 관한 실체설과 관련되며, 공익을 사회전체 효용의 극대화로 본다. 사회구성원의 효용을 계산한 다음 전 구성원의 총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 간 분배의 공평(배분적 정의)은 고려되지 않는다. (예 사회 구성원이 A, B 두 명뿐일 때 A의 효용 100, B의 효용 0인 정책(총합 100)이 A의 효용 45, B의 효용 45인 정책(총합 90)보다 공익에 합치)
 ㉡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는 결과를 중시하는 목적론적 윤리론을 따른다.

■ 가치에 대한 상대론(목적론)과 절대론(의무론)

목적론(상대론)적 가치론(결과주의)	의무론(절대론)적 가치론(=법칙론)
• 보편적 가치판단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 결과에 관계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 기준이 선형적으로 존재함 (상황을 초월한 근본적·절대적 행동기준에 관심)
• 목적· 좋음(good)에 초점	• 의무·옳음(right)의 내용에 초점
•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	• 행위 자체의 '이유'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
•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좋음	• 일정한 도덕적 의무나 법칙에 일치하는 행위가 옳음
• 공리주의(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추구), 쾌락주의, 마르크스주의	• 사회적 정의나 형평성. 칸트(I. Kant), 롤스(J. Rawls)의 정의론

- ㉢ (×) 공리주의는 도덕적 의무나 법칙보다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강조하므로 형평성·합법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성과 등 결과적 가치를 강조한다.

답 ③

16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②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③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은 책임운영 기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건 중의 하나이다.
 ④ 1970년대 영국에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설

- ① (○)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
 ② (○) 대국민 서비스 기능 중 사업성은 강하나 공공성이 커서 초기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기관에 적용된다.
 └ 공공성 요청 < 효율성 요청 ⇨ 민영화
 └ 공공성 요청 > 효율성 요청 ⇨ 책임운영기관(공공성과 효율성 고려)
 ③ (○)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강조하므로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객관적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④ (×) 1988년 영국에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
 우리나라는 1999년 관련 법률 제정, 2000년부터 설치·운영.

■ 책임운영기관 설치 사례

외국사례	① Executive Agency : 최초로 영국 Next Steps Program에 따라 1988년 지정. 정부조직으로 설치(hive-in 방식) ② Crown Entity(독립사업기관 : 뉴질랜드 1988, hive-out 방식인 준정부조직 형태로 도입) ③ Statutory Authority(호주, 1988) ④ Special Operating Agency(특별운영기관 : 캐나다 1990) ⑤ Performance Based Organization(PBO : 성과기반조직, 미국 1995년 NPR에서 건의 후 1998년 설치) ⑥ 독립행정법인(일본, 1997)
우리나라	1999년(김대중 정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0년부터 설치.

답 ④

17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킹턴(Kingdon)의 정책흐름이론에 따르면 정책변동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② 무치아로니(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에서 이슈 맥락은 환경적 요인과 같이 정책의 유지 혹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인을 말한다.
 ③ 실질적인 정책내용이 변하더라도 정책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책유지라 한다.

- ④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수단을 소멸시키고이를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정책종결이라 한다.

해설

- ① (○) 킨던(Kingdon)의 정책흐름이론에 따르면 문제흐름(problem stream), 정치흐름(political stream), 정책흐름(policy stream), 이 상호 독립적으로 방만하게 흘러 다니다가 일정한 상황에서 만날 때(coupling) 우연히 정책으로 채택됨(정책의 창이 열림).

- ② (○) **이익집단 위상변동 모형(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 Framework) - 무치아로니(G. Mucciaroni)**

이슈맥락과 제도적 맥락의 변화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의 위상이 바뀌면 정책의 내용도 변동될 수 있음.

㉠ **이슈맥락**: 정치체제 외부의 상황적 요소로서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이나 주장을 옹호하는가, 반대하는가의 여부

㉡ **제도적 맥락**: 대통령·의회지도자 등 정치체제 구성원들이 특정한 정책이 산업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선호나 행태가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과 주장에 대해 호의적인지 여부. 이슈맥락보다 중요.

이슈 맥락	⇒	정책 변동	⇒	이익집단 위상변동	구 분	제도적 맥락(더 중요)		
						유리	불리	
제도적 맥락	⇒				이슈맥락	유리	위상 상승(fortunes rose)	위상 저하(fortunes contained)
						불리	위상 유지(fortunes maintained)	위상 쇠락(fortunes declined)

2개의 맥락이	모두 유리	이익집단에게 유리한 정책이 유지되거나 불리한 정책이 유리하게 변동 ⇒ 이익집단의 위상 상승
특정 이익집단에게	모두 불리	이익집단에 유리한 정책이 사라지거나 불리하게 변동 ⇒ 이익집단의 위상 쇠락
2개의 맥락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때		제도적 맥락에 크게 영향 받음(이슈맥락이 유리해도 제도적 맥락이 불리할 때는 정책이 불리하게 돌아가며, 이슈맥락이 불리해도 제도적 맥락이 유리하면 정책이 불리해지지 않음)

- ③ (×) 정책목표가 변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정책내용이 변하는 것은 정책승계이다. 정책유지의 경우 정책목표나 실질적인 정책내용의 변화는 없다.
- **정책유지(maintenance)**: 기존 정책의 기본 성격 유지, 기존 정책의 내용·담당조직·예산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며 약간씩만 수정·변경. 기존 정책을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산출이나 정책수단의 일부나 집행절차를 조정 하는 수준.
예 정책수혜 대상자의 수나 수혜액, 수혜자의 자격 등 조정
 - **정책승계(succession)**: 기존 정책의 목표는 유지하되 의도적으로 정책의 기본 성격을 바꿈. 정책의 근본적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정책내용, 담당조직, 예산항목 등을 대폭 수정·변경하거나 이들을 모두 없애고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 신·구 정책 간 상당한 연계성·중첩성 있으며 기존 정책을 수정·조정하는 것임. 정책목표는 변화하지 않는 점은 정책유지와 유사하나 정책승계는 정책수단인 사업, 담당조직, 예산항목 등에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정책유지와는 다름

정책유지	목표 유지	적응적(adaptive) 변화	소폭 변경(산출이나 정책수단 일부 조정), 기본적 성격 유지 예 청년인턴제 대상 기업 및 지원금액 조정
정책승계	예 청년실업해결	의도적(purposive) 변경	대폭 변경(수단 자체의 변경 포함), 기본적 성격 변화 예 청년인턴제를 폐지하고 청년실업자 구직촉진수당제로 전환

- ④ (○) 정책종결: 정부가 개입을 전면 중단하고 의도적으로 기존 정책 및 정책 관련 조직·예산·법령을 폐지고, 다른 정책으로 대체되지 않는 것.
cf) 정책승계 중 선행승계: 정책목표를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정책을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정책으로 대체

답 ③

18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사혁신처는 비독립형 단독제 형태의 중앙인사기관이다.
② 전문경력관이란 직무 분야가 특수한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③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5세이며,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설

- ① (○) 국무총리 소속(비독립), 인사혁신처장(단독제)
② (○) 전문경력관: 계급 구분과 직군·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 가능.
③ (×)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2009년 원칙적으로 **60세로 통일**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④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답 ③

19 정책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매개변수 - 독립변수의 원인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제3의 변수
 ㉡ 조절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
 ㉢ 억제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
 ㉣ 허위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들 사이의 공동변화를 설명하는 제3의 변수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 (X) 매개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사이에서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
 ㉡ (O) 조절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제2의 독립변수, 두 변수 간 관계(상호작용효과)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킴
 예) 다이어트 요법 A, B(독립변수)의 체중감소효과(종속변수) 측정시 효과 동일
 다이어트 요법 A, B에 각각 운동요법 결합시 체중감소효과가 A보다 B가 큰 경우 운동요법은 조절변수
 ㉢ (X) 허위변수에 대한 설명.
 ㉣ (O) 허위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실제 관계가 없는 데도 두 변수에 영향을 미쳐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이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간 공동변화를 모두 설명한다.
 • X : 독립변수 • Y : 종속변수 • Z : 제3의 변수

허위변수	혼란변수
X와 Y 두 변수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간 공동변화를 모두 설명하는 변수 	X와 Y 두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 간 공동변화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하는 변수 
예) 까마귀 날자(독립변수) 배 떨어짐(종속변수). 까마귀는 날면서 배나무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 날아감(허위상관). 아래서 배나무를 흔든 사람(허위변수)이 있었음 • 공동변화 설명 ㉠ 나무를 흔들어서 까마귀 날아갔다 ㉡ 나무를 흔들어서 배가 떨어졌다	예) 배나무 흔들어서 까마귀도 날아가고 배도 떨어짐. 이번에는 까마귀가 배나무를 세차게 건들면서 날아감. 배가 떨어진 요인에 나무를 흔든 것과 까마귀가 건든 것이 작용. • 공동변화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함 ㉠ 나무를 흔들어서 까마귀 날아갔다 ㉡ 나무를 흔들어서 배가 떨어졌다 ㉢ 까마귀가 건들어서 배가 떨어지는 데 어느 정도 작용한 지는 설명 곤란

정확평가시 인과적 추론을 어렵게 만드는 제3의 변수

• X :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 • Y :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 • Z : 제3의 변수 * 독립변수는 정책수단, 종속변수는 정책효과에 해당.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모두 영향	허위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실제 관계가 없는 데도(또는 통계적 상관관계만 있는데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
	억제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상관관계가 있는 데도 없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변수(사실적 상관관계를 약화·소멸시킴)
	외국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사실상의 관계를 정반대의 관계로 나타나게 하는 변수
	혼란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상관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양 변수에 영향을 주어 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 평가하게 만드는 변수(교란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제2의 독립변수, 두 변수 간 관계(상호작용효과)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킴	조절변수	예) 다이어트 요법 A, B(독립변수)의 체중감소효과(종속변수) 측정시 효과 동일 다이어트 요법 A, B에 각각 운동요법 결합시 체중감소효과가 A보다 B가 큰 경우 운동요법은 조절변수.
$X \Rightarrow Z \Rightarrow Y$	매개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사이에서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 ㉠ 집행변수 :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내용을 실행해 옮기는 데 채택된 구체적 행정적 전략 ㉡ 교량변수 : 정책목적의 달성에 앞서 나타나야 할 일종의 중간 결과
$Z \Rightarrow X \Rightarrow Y$	선행변수	인과관계에서 독립변수에 앞서면서 독립변수에 대해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 * 선행변수가 의미를 가지려면 ㉠ 선행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상호관련이 있고, ㉡ 선행변수를 통제할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가 사라지면 안 되며, ㉢ 독립변수를 통제할 때 선행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가 사라져야 한다.

답

20 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된다.
 ㉡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이며,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 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전액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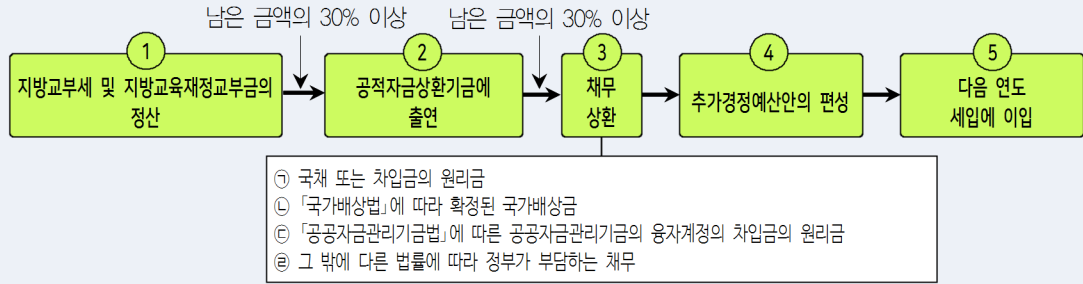
② ㉡

③ ㉠, ㉡

④ ㉡, ㉢

해설

- ㉠ (○) 세계잉여금은 예산집행 결과 세출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을 지칭하므로 일반회계의 특별회계는 포함되나 기금은 제외된다.
 ㉡ (×)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반드시 부(-)의 관계(역의 관계)인 것은 아니다. 세계잉여금은 사용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세계잉여금이 증가해도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면 적자국채 발행규모도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만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할 수는 없다.
 ㉢ (×) 세계잉여금(세계순잉여금을 의미함)의 사용 우선순위



답 ①